

충남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한 소고



김만희 |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교육인증
지원실장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확대된 국가 평생교육정책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가가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해 온지도 벌써 10여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자체 정책간담회나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역에서 이루어진 평생교육사업은 대다수가 국가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정책지원사업 추진 10여년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국가의 추가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지역 중심의 자치기능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생각해보면, 지역은 국가의 예산지원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의 공식적인 시발점은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의 학습력 향상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노력이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지역 평생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학습은 국가가 추진하는 개별단위사업의 수준을 넘어 논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즉, 국가의 예산지원 규모가 최소화 된다하더라도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금산군을 비롯하여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서천군 등 7곳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이는 충남지역 16개 시군의 약 44%에 이르는 수준이다.

우리는 종종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논하면서 국가의 예산지원 규모를 언급한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은 주민의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에의 전면적 책임이 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는 지역의 필수 의제로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충남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국가의 예산지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과 충남의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지길 바란다.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과 같이 충남은 평생학습시대의 도래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되, 구체적인 행동 전략은 16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을 통한 충남의 발전은 어느 순간 “쓰나미”처럼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밀려올 것이다.